

●일일스터디_표준안

이름 / 언론사 / 작성날짜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한동훈 복당 의지...“천년만년 무소속이면 이렇게 모이셨겠나”	정치	
2	“오세훈 당선인 확정 못할 판” vs “진영 상관없이 재선거하라”	정치	
3	잠실7동 이틀째 대치...공무원도 “선관위, 이런 모자란 집단”	사회	

(1)기사/뉴스요약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부산 북갑 재선거에서 승리한 무소속 한동훈 당선인이 4일 “부당하게 제명된 날 반드시 돌아간다고 말씀드렸다”며 복당 의지를 드러냈다. 실제로 한 당선인은 올해 1월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당 지도부가 제명을 결정한 뒤 “절대 포기하지 말라. 기다려달라.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말한 바 있다.

한 당선인은 이날 부산에 마련한 선거사무소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당선 이후 국민의힘으로 돌아가 보수 재건 계획이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 선거 승리도 그 약속을 실천하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소원했던 많은 의원님들과 덕담을 나누며 통화했는데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도 보수 재건 방향은 분명히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제가 제시했던 보수 재건의 명분이나 대의에 공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느끼고 있다”며 “이번 선거 민심을 바탕으로 보수 재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 당선인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당권파를 겨냥해 “언행이 보수 정당이 가져온 품격이나 실력에 맞지 않다”며 “이제는 좀 반성하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점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시다”고도 부연했다. 한 당선인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우리가 왜 정치하는지 그 것에 관한 공감대를 통해 보수 재건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그걸 먼저 생각한다. 이 선거를 통해서 드러난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도 공언했다. 한 당선인은 “저의 승리가 이재명 정권의 ‘공소취소’ 폭주에 대한 명백한 경고가 될 것”이라며 “이를 저지해야 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이번 선거에서 분명히 드러난 민의(民義)를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한 당선인은 “이 대통령이 자기 대리인으로 내세우고 여러 방식으로 개입했지만, 결국 무소속인 한동훈에게 패배했다”며 “공소취소 같은 험잡(挾雜)을 시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물어보자는 걸 선거 내내 얘기했는데 그 점을 받아들이라고 경고한다”고 했다.

의정 활동에 있어 무소속의 한계를 묻는 말에 “천년만년 무소속이었으면 이렇게 많이 모이셨겠나”라며 “저의 당선으로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공약 내용에 대해 상당 부분 말씀드린 상황이라서 그 이행 과정을 지켜봐달라”고 했다. 이어 “(1호 입법안은) 발달장애 지원책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회수법’이라는 이름의 법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재보궐에 당선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유의동 의원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좋은 정치인이다. 좋은 정치인이 국회로 들어오는 데 대해 (당선 소식에) 박수를 친 것”이라고 했다.

2)기사/뉴스요약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 파행을 겪은 서울 송파구 잠실7동 2투표소 앞에서는 이틀째 재투표를 요구하는 시위대가 투표함 이송을 가로막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을 비롯한 지역 선거구의 당선인 확정이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몰려 재선거를 요구했다.

● ‘용지 부족’ 송파 투표함 이틀째 제자리

잠실7동 2투표소가 마련된 송파구 한 아파트 단지 경로당 앞에는 3일 밤부터 인근 주민뿐 아니라 유튜버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 약 300명이 몰려 극심한 혼란을 빚었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개표 무효”, “선관위 해체” 등의 구호를 외쳤고, “투표함 이송을 막아야 한다”며 투표소를 겹겹이 에워쌌다. 4일 0시 10분경엔 한 시위 참가자가 투표소 화장실 창문을 강제로 열고 난입을 시도하는 등의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70대 여성 주민은 “시끄러워서 한숨도 못 잤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대치가 장기화하자 4일 오전 10시 45분경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현장을 찾아 중재에 나섰다. 시위대는 강경한 태도로 일관했다. 김범진 서울시선관위 사무처장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태) 개표 결과가 확정돼야 효력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거나 부정선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투표함 이송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시위대는 “진영과 상관없이 명백한 부실 선거이므로 재선거하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급기야 현장을 떠나려던 김 처장을 시위대가 “책임져라, 다시 건물로 들어가라”며 밀치고 가로막는 등 물리적 충돌까지 벌였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2000여 명의 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투표함이 억류되면서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 송파 지역구 서울시의원 비례대표는 5일 예정했던 당선증 교부식이 취소됐다. 송파구청장도 당선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 과천시도 밤새 시위, 헌법소원 예고도

경기 과천시 선관위 청사 앞에서도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집회가 3일부터 밤새 열렸다. 경찰 등에 따르면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를 비롯한 참가자들은 4일 오전 일찍부터 집결해 “서울뿐 아니라 인천 등 곳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이번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경찰 추산으로 새벽 한때 1200여 명까지 늘어난 시위대는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 등과 합류해 선관위 정문 개방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이 경찰 버스와 펜스 철거를 요구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등 한때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으나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이들은 이후에도 노태약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차량 이동을 막겠다고 밝히며 시위를 이어갔다.

이날 헌법재판소에는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위헌인지 따져달라”며 일반인이 낸 헌법소원이 1건 접수됐다. 청구인은 “투표용지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게 선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가 노 위원장 등을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광범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문제가 된 투표소 중 일부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3) 기사/뉴스요약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 제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 반출을 둘러싼 대치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부정선거론’을 주장해온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와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도 현장에 나타났다. 시위대들은 “부정선거 척결”, “선관위 해체” 등 의 구호를 외쳤다.

4일 이날 오후 7시 기준 잠실 제7동 제2투표소 앞에는 경찰 추산 약 600명 이상이 모여 투표함 반출을 막기 위해 투표소 주위를 원천 봉쇄했다. 현장에서 구호를 연호하는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자, 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내부 선관위 직원들과 투표 참관인들의 식사 문제도 발생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순애 송파구의원은 이날 오전 투표소를 찾아 건물 내부 직원 10여명이 어제부터 식사를 못하고 있다고 시위대를 설득했다. 김 구의원을 통해 내부에 식료품이 전달됐다. 아파트 단지 내 많은 인파가 모이면서 출근시간대 차량 통행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장 지원에 투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송파구 공무원은 “더 이상 선거 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회를 공개 비판했다. 전날 송파구 소속의 한 공무원은 ‘공무원노조 참여마당’ 게시판에 ‘선거관리 도저히 못 한다’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긴말 안 한다. 우리 송파구 직원들은 더 이상 선거 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고 적었다. 이어 “어떻게 이런 사태가 벌어지도록 송파구 선관위에서는 직원이 한 명도 현장에 안 올 수가 있느냐”며 “더 이상 이런 모자란 집단과 일 못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 사무는 선관위에서 단독으로 하라”며 “더 이상 지자체 공무원을 총알받이로 쓰지 말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리고 퇴근시켜 달라. 내일 우리 지자체 공무원은 정상 출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 서울 송파구, 강남구, 광진구 등 일부 지역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은 전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투표소를 찾은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선관위는 4일 새벽 긴급회의를 연 후 입장문을 통해 “현재 진행되는 개표를 중단하는 것은 불가하다.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표함은 개표소로 이송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장의 혼란은 밤새 이어졌다. 특히 잠실7동 제2투표소는 투표함 반출을 저지하는 인파가 수백명이 몰렸고 선관위 관계자들을 압박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일부 시민과 유튜버, 취재진 등이 투표소 주변에 모여들면서 혼란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부정선거”, “개표 중단” 등의 구호를 외치며 투표함 반출 중단을 요구했다.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시위대의 투표함 반출 저지는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약 2000명 분량의 투표지가 이틀째 개표소에 가지 못한 상태다. 현재 서울시선관위는 투표함 이송을 강행하진 않겠다는 방침이다.